

보도시점 2023. 11. 15.(수) 08:00 배포 2023. 11. 14.(화) 15:00

##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 촉진을 위한 단계별 지원 강화

- 비진학 고등학생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설,  
7.4만명에 일경험 기회 제공
- 취업초기 청년의 직장적응을 위한 조직적응(온보딩) 프로그램 신설
- 쉬었음 청년의 구직단념을 예방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도입,  
구직단념 청년을 위한 청년도전프로그램 강화

정부는 11월 15일(수)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쉬었음 청년 증가에 대응하여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

‘23년(1~9월 평균) 청년 쉬었음 인구는 41.4만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이며, ‘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 올해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4개월간(7~10월)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쉬었음 청년의 유형별 특성\*을 체계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취준-적극형) 직장경험x, 구직의욕↑ (취준-소극형) 직장경험x, 구직의욕↓,  
(이직-적극형) 직장경험o, 구직의욕↑ (이직-소극형) 직장경험o, 구직의욕↓,  
(취약형) 다양한 환경적 취약성으로 니트화 위험성↑

### ①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대응

**[재학]** 먼저 재학 단계부터 조기 개입을 강화하여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쉬었음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속히 노동시장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본격 시행(12→50개교)하고 직업계고, 일반계고 비진학 청년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24년, 20개소)도 신설한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경험 기회를 총 7.4만명(민간 4.8만명, 공공 2.6만명)으로 확대하고 일경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연계(매칭)까지 지원하는 일경험통합플랫폼을 내년부터 운영한다.

더불어, 청년들의 취업준비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기술 자격 응시료를 50% 할인 지원할 계획이다.

**[재직]** 재직 단계에서는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직장 부적응 등으로 노동 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조직적응(온보딩) 프로그램(10개 지자체, 44억원)을 도입하여 직장적응을 지원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기반(인프라) 구축(50→850개소) 및 상담(컨설팅) 지원(연 400개소)을 강화한다.

**[구직]** 마지막으로 쉬고 있는 청년이 구직을 포기하지 않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가칭'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하고 '청년도전지원 사업'을 개선한다.

'가칭'청년성장프로젝트'는 일상유지 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쉬고 있는 청년의 구직단념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10개 지자체를 통해 '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직단념청년 특화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지원인원을 9천명으로 확대하고, 중기 프로그램(3개월) 신설, 참여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 확대, 이수 후 취업 등 연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니트청년 특화 일경험(6천명)을 신규 도입하고 청년이직자를 위한 경력재설계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 ② 특성별 취약청년 지원

다양한 환경적인 취약성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취약청년을 위해서는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13억원) 도입,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연 200만원)을 신설하는 등 특화지원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참여 장애요인을 해소한다.

## ③ 기반(인프라) 개선

**[발굴 및 전달체계]** 쉬었음 및 니트청년 발굴 및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고,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한 니트청년 발굴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 또한, 쉬었음 청년 증가의 근본원인인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산리단길, 스마트공장 지원 등 청년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2.4만명, 최대 200만원), 상생연대형성 지원(최대 50억원) 신설 등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별첨: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청년정책과	책임자	과 장	허수진 (044-215-8580)
		담당자	사무관	주윤희 (044-215-8583)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종호 (044-202-7440)
		담당자	서기관	조아라 (044-202-7458)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청년장학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태경 (044-203-6267)
		담당자	서기관	윤혜준 (044-203-6272)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	책임자	팀 장	장영진 (044-202-3701)
		담당자	사무관	박진웅 (044-202-3702)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영호 (044-203-4430)
		담당자	서기관	김 호 (044-215-4439)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청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명진 (044-215-7950)
		담당자	사무관	이기택 (044-204-7952)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책임자	과 장	조 린 (02-2100-6311)
		담당자	사무관	최요한 (02-2100-6319) 오주윤 (02-2100-6318)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 청년정책조정과	책임자	과 장	염철민 (044-200-1994)
		담당자	서기관	공도연 (044-200-1995)

#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주요내용

- 쉬었음 청년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대응 강화
- 발굴·전달체계 강화 및 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 등 인프라 개선 병행

	취준 적극형	취준 소극형	이직 적극형	이직 소극형	취약형
직장경험	x	x	o	o	환경적 취약성
구직의욕	↑	↓	↑	↓	

## 1 재학

### 재학단계 조기개입을 통한 원활한 학교-노동시장 이행 촉진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충**

대학생	고등학생	지역청년
50개 대 38개	20개 소 신설	60개 대 11개

**양질의 일경험 기회 확대**

민간	중앙부처	공공기관	대학(위탁)
4.8만명 2.2만명	5천명 3천명	2.1만명 0.1만명	18개 대 5개

**기업수요 기반 인재양성·취업역량 제고**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청년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 75개 학과 20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19개교 4개 부트캠프 42개교 32개	K-디지털 트레이닝 4.4만명 0.8만명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50% 할인

## 2 재직

### 직장적응 지원 및 기업문화 개선으로 노동시장 이탈 방지

**신입사원 온보딩 프로그램 신설(44억원)**

입직청년	기업
직장적응교육 450회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교육 160회

**일·생활균형 직장문화 확산**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지원 850개소 800개소	유연근무 컨설팅 400개소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신설 1인당 30만원
------------------------------------	----------------------	-------------------------------

## 3 구직

### 특화 프로그램 집중 지원을 통한 쉬었음 장기화 예방 및 탈출 지원

**구직단념 예방: 청년성장 프로젝트 신설(281억원)**

미취업청년 대상 **일상유지·자조모임·심리상담** 제공(10개 지자체)

**구직의욕 고취: 청년도전지원사업 강화**

지원인원	프로그램	수당체계	훈련비
9천명 1천명	중기 과정 (3개월)신설	구직노력 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자부담율 인하

**특화 일경험 및 경력재설계 지원**

니트 특화	이직청년
일경험 신설 6천명	경력재설계 서비스 신설

## 4 취약 청년

### 특성별 장애요인 해소 + 고용서비스 연계

**특성별 지원 강화**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사회복귀·재직 프로그램 신설 13억원	자기돌봄비 신설 연 200만원
자립준비청년	장애질환청년
자립수당 인상 10만원	자활근로 6.9만명 장애인 취업패 1.3만명

**고용서비스·민간 인턴십 연계**

## 발굴·전달체계 강화



쉬었음 관계기관  
정례 협의체 신설



공공데이터 활용  
발굴방안 모색

## 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

- 산리단길(1,867억원)
- 빈일자리 청년 지원금(2.4만명, 신설)
- 스마트공장 로봇자동화 지원(317억원)
- 상생연대형성 지원(50억원)

